

현재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대상 체불 전수감독 진행 중, 처벌불원서 강요 등 위법행위 엄정조치

1. 관련 기사

- 6.16.(화) 한국일보(온라인), “차가원 3사 피해 임직원들 ‘월급 밀려 극심한 생활고… 조롱까지 당해’ 주장”, “처벌불원서 서명해야 밀린임금 준다고 주장”

2. 설명 내용

- 현재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에 대한 체불 전수조사·감독을 실시 중에 있으며, 임금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금, 퇴직연금 등 체불이 의심되는 금품 전반을 조사하고 있음
- 특히,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‘처벌불원서’는 피해 노동자가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으며,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될 수 없음
 - 사업주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‘처벌불원서’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*에 해당하는 만큼, 피해 노동자들에게 처벌 불원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,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임
- * 형법 제324조(강요)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- 아울러, 체불임금이 조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, 허위 서류 제출 등 감독·조사 방해 행위 여부가 있는지도 철저하게 확인·조치할 계획임

담당 부서	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아라 (044-202-7553)
		담당자	서기관	박종길 (044-202-7528)
	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 노동기준감독과	책임자	주무관	오성곤 (044-202-7531)
		담당자	과장	손광진 (02-3465-8420)
			근로감독관	장상훈 (02-3465-8472)